

정보사회와 정보화정책의 분석틀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기술이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 문 기**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와 사회발전의 쟁점을 국제지형에서 살펴보고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의 정책설계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보사회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인 주류적 관점과 비판적 관점을 고찰하고, 각국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성장, 민주화, 정보화의 객관적 차원을 핵심변수로서 통제한다. 방법론적으로는 회귀분석을 기초로 삶의 질에 관한 정보화효과를 검증하고 사회문화적 차원을 반영한 가치관 지형도를 활용함으로써 비교분석의 잣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분석결과는 경제성장 및 민주화의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정보화가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ICT에 따른 낙수효과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적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삶의 질에 작용하는 가치유형으로는 자립수준, 경쟁추구, 정부책임이 중요하며, 정보화와 세 가지 가치의 조합은 전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요컨대 정보화 및 사회발전에 관한 분석틀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기초한 정책설계가 중요하다.

주제어: 정보사회, 정보화정책, 삶의 질, 문화가치

An Alternative Research Framework of the Information Society and ICT Policy for Development

Suh, Moon-Gi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present critical issu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and an alternative research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ensuring that ICT is applied in ways that are enabling and responsive to social contexts in which people live their lives. Drawing the question of why insights arising from the mainstream vision are rarely useful in policies, the study highlights some developmental paradigms linked to ICT. It explores how ICT is seen as a means to development, and elaborates on the limitations of how current issues are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The results indicate that ICT reduces quality of life while economic growth entails the opposite. The research framework here involves some meaningful components of cultural residues: independence, risk-taking, government responsibility by mapping how the level of ICT is distributed in the topology of values around the world. Moving to the next phase, ICT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need to be set up practically in a broad perspective that can be pursued by those concerned with social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Keywords: information society, ICT policy, quality of life, cultural values

2016년 4월 21일 접수, 2016년 5월 10일 심사, 2016년 5월 23일 게재확정

*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고정재기 교수님과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자료수집 및 편집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유정 조교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mgsuh@ssu.ac.kr)

I. 서론

오늘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급속한 발달은 산업 사회의 모습과는 완연하게 다른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경제활동, 사회조직, 문화가치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으며 지구상의 어느 국가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강대국의 개념도 군사 및 제조업 강국에서 지식 및 정보 강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능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서문기, 2008). 21세기 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생존의 중요한 자원이자 발전의 핵심 요소인 것이다. 산업사회가 구축해 놓았던 의사소통의 장벽과 정보유통의 장애를 해체시킨다는 점에서 정보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잠재력과 영향력은 기술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삶의 질 영역에 이르게 된다. 경제적 차원에서 ICT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으며, 기술적 차원에서는 디지털 융합을 거쳐 모바일 및 인공지능 혁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정보 및 의사소통방식이 바뀔에 따라 조직의 유형과 사회관계가 새롭게 재편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이버공간을 통한 숙의민주주의와 네트워크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렇다고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인간 및 사회의 본질과 삶의 질에 관한 위상이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보화과정은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 불안정화 및 탈숙련화 등을 가져오며, 정보 권력이 독점, 강화됨에 따라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인권보장이 어려울뿐더러 정보격차의 위험 신호가 이미 켜진 상태이다. 표면적으로 의사소통의 기회가 증가하더라도 실제로는 코드화된 구성원의 양성과 개인의 단절 및 고립화를 초래하여 생활세계에서의 탈(脫)인간화와 문화지체 등을 통해 삶의 의미나 가치가 훼손되기도 한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

고 상품화과정이 진행되면서 ICT의 도구적 효용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한다면, 사회발전의 역설인 것이다. 마치 산업화가 생산력의 급격한 증대에 기초하여 인간과 생산,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분리를 통해 소외를 배태하였듯이, 정보화 역시 이 점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회의 복합성을 증가시키며,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공학적 힘의 크기가 아니라 가치관의 충돌인 것이다. 이렇듯 정보사회의 양면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사회발전에 관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효과에 따른 발전전략을 새롭게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발전에 대한 ICT의 역할은 정보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자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다루어야 할 연구주제로 간주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제가 왜 새삼스럽게 문제가 되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좀 더 근원적인 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회변동의 폭과 깊이도 증대되어 왔지만, 이러한 흐름을 충분히 파악하거나 제대로 분석할 겨를도 없이 우리 스스로가 현실적 이해관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더욱이 대부분 관련 연구들은 과학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서술적인 묘사나 당위론적 주장에 그치는 경향이 많으며, 연구결과 자체도 객관적 신뢰성이 결여되어 연구 성과의 실제적이고 누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척박한 환경이다(Heeks, 2012; 유재미 외, 2015). 이는 마치 대기 자체가 고요하여 연못에 돌을 던지더라도 수면 위의 작은 잔물결은 일으키지만 금방 수면 아래로 흔적도 없이 가라앉는 모습과 같다.

정보화와 사회발전 분야의 연구는 예외 없이 ICT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사회발전의 최종 목표인 삶의 질에 대한 조건을 실현시키는데 관심을 집중시킨다(Garnham, 1997; Unwin, 2009).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의 접근, 사용, 활용으로부터 공동체의 발전에 필수적인 산업화와 민주화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에 관한 함축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문제는 사회발전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역할이 종종 당연시되며, 기술 및 사회의 한 가지 영역에 초점을 둬으로써 양자 간의 구조적인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사회발전에 관해 가라앉는 각각의 돌덩어리를 하나의 뚜렷한 이정표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할 수 있다. 만약 ICT가 삶의 질에 적용이 가능하다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사회의 속성과 정보화과정의 흐름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ICT의 사회발전에 대한 영향력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효과적인가? 정보화정책은 사회발전의 현안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와 사회발전의 쟁점을 국제지형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의 정책설계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정보사회의 속성에 따른 이론적 함의를 천착하고 각국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삶의 질의 편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경제성장, 민주화, 정보화의 객관적 차원을 핵심변수로서 통제한다. 방법론적으로는 회귀분석을 기초로 삶의 질에 관한 정보화효과를 검증하고 사회문화적 가치를 둘러싼 가치관 지형도를 활용함으로써 비교분석의 잣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특히 사회발전과 ICT 역할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인 주류적 관점과 비판적 관점을 고찰하고, 기술혁신의 진보적이고 파괴적인 이중적인 속성과 사회발전의 연결고리에 방점을 둔다. 요컨대 정보화 및 사회발전에 관한 분석틀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기초한 정책설계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관한 접근은 문헌상으로 상당히 복잡하며 이는 연구자마다 개념규정을 들

려싸고 서로 다른 이론적 시각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사회발전에 관한 기술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주류적 시각과 부정적인 측면을 경계하는 비판적 시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정보화의 정의 효과를 강조하는 주류적 관점에서는 세계경제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화가 빈곤을 타파하고 경제성장의 기회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기술의 진보적 성격을 강조하는 이 시각은 ICT에 대한 투자와 효과적인 활용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서 관건이 된다고 본다(UNDP, 2015; 황성중, 2007). 정보화과정에 따른 조직체의 재구조화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정책과 예산 면에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성과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자유화 및 민영화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쟁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간과한다. 세계화과정에 의해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부와 권력의 편중이 심화되는 것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빈자와 여성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격차 등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에 유의하는 비판적 관점은 ICT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주류적 관점에 대해 경험적 타당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 관점은 영역별로 차등적인 여과효과(Filtering Effect)를 가져다주는 불평등과 갈등기제에 초점을 둬으로써 기술혁신 자체가 불평등한 자원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과 자본의 논리 및 국가권력의 숨은 의도를 규명하는데 관심을 갖는다(Donner, 2008). ICT가 현재의 불평등과 권력관계를 강화할 따름이며 정보화에 의한 발전의 혜택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오랫동안

동안 정치경제적 우위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접근 및 활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송희준, 2008). ICT 정책을 둘러싼 권력 갈등은 현실적으로 정보격차와 같은 불평등한 상태를 더 악화시키며 삶의 기회를 확장시킬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는 효과를 내재하고 있기도 하다(Madon, 2004).

정보화정책은 정부의 사회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정부부처간의 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책 네트워크의 구조적 힘에 기인한다(Brown, 2006; 송경재 외, 2008; 한세익, 2010). 이 시각에 의하면, ICT가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준거들을 배제하고서는 발전의 성격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서구의 안보 및 성장 전략에 따른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이들 국가에서 기술 및 자본도입은 주로 국제금융질서의 차관형태에 의존하며, 외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됨에 따라 대부분 서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제기구의 통제를 받기 마련이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개발도상국의 국가예산, 기술혁신, 정보화전략 등 정부정책에 영향을 주게 되어 사회구성원의 삶 속에서 느끼는 정보화 수준의 차이를 감수해야 한다. 즉 개발도상국의 정보화과정은 주어진 사회보다는 선진국의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제지형의 함수관계를 반영할 때 정보화정책의 실제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기술혁신이 서구 선진국에서 발생하여 여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연결성을 확산시킨다는 관점은 정보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제도수준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국가경쟁력을 강조함으로써 ICT의 진보적인 역할을 정당화한다(Wade, 2002). 실제로 기술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이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은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는 데 필요하며,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주요 행위자에 의해 좋은 의도로 사용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ICT

접근과 사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정보화정책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의 확산이 정의 효과를 이끌 것이라는 공급자의 균질적인 믿음도 위험하다(송효진, 2015). 정보통신기술을 선용한다는 것은 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이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인지하고 바람직하게 수용하느냐라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ICT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기술이 영향을 주듯이 사회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자동적으로 덮어버리는 격이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정보흐름을 설명하는 데 당연시되어 온 기존의 가정이 타당한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오철호, 2015).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보사회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제적 차원에서 정보와 관련된 생산 및 노동 활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집중하여 왔다(Machlup, 1962; 梅棹忠夫, 1967). 1970년대는 산업사회의 물질적 기반을 대체하는 정보가치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강조한다. 이 시기는 ICT가 경제적 차원을 넘어 광범위한 사회적 관심사이며 사회발전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기대와 함께 기술결정론의 관점이 주도하는 단계이다(Bell, 1973; Golding, et al., 1978). 1980년대에서는 기술과 사회 영역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대부분 정치경제적 분석틀 안에 머무는 한계를 갖는다(Beniger, 1986; Schiller, 1984). 1990년대의 연구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네트워크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사회변화의 양상을 조명하고 있다(Brock, 1998; Castells, 1996).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국제지형에서 정보화과정이 확산되는 과정에 주목하게 되는데, 대부분 연구 결과는 국가별 분화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정보사회를 향한 일반적인 수렴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Franda, 2001; Keohane, et al., 2000). 최근에는 정보사회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사회발전의

분석틀에 대한 경험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비판적 성찰과 대안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Oosterlaken, 2015).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ICT 서비스의 자유화 및 민영화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재 네트워크의 발전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반시설의 확충 및 응용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낸다(Sichel, 1997). 정책적 차원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시장주도형으로 대체함으로써 ICT 기업의 수요에 맞추며, 신자유주의 논리에 의해 정보통신 분야는 이윤이 기대되는 지역에서 확산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ICT에 의한 연결성은 세계화를 촉진시키지만, 이미 국제기구 및 조약에 의해 불평등 조건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Brownlie, 2002). 선진국 기업은 자국 조건에 알맞은 기술을 설계, 개발하며, 이를 개발도상국에 수출할 때 새로운 형태의 지배 및 종속관계를 초래할 수가 있다.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선진국의 생산자 및 고객과의 연결을 위해 정보통신장비와 표준기술을 채택해야 하며 교환주기도 매우 짧게 형성이 된다. 요컨대 정보통신기술이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서 개발된다는 신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용되어 ICT 혁신을 둘러싼 권력과 이해관계를 놓치기가 쉽다.

미시적 차원에서 ICT 접근은 흔히 내재적인 정보보다 외부에서 생성되고 가공된 정보에 노출, 흡수되는 경향을 말한다(Thompson, 2008). 문제는 정보를 생활세계의 주요 원천이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료로 개념화함으로써 나타나는 상품화과정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지적 재산권 규제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처럼 정보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값을 지불한다. 이러한 규제는 공적 영역의 비용부담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기업에게 유리한 혜택을 가져다준다. 생산자의 경우 농어촌에서와 같이 생산물에 대한 가격 정보를 수집, 활용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효과를 갖지만, 동시에 시장기제에 대한 적

응을 강제한다. 생산자가 가격변동에 가장 취약한 체인의 밑바닥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게 하며, 대신 중개, 수송, 광고 종사자들이 시장논리 안에서 연계되어 막대한 이윤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ICT가 사람들의 삶의 질에 차이를 만들고 영향을 주는 구조적 맥락에 특별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보사회의 개념은 기술혁신과 이에 따른 대전환을 의미한다. 기술에 의한 사회발전의 돌파구는 경제적 차원과 필연적으로 선택적 친화력(Elective Affinity)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술혁신의 파동효과는 경제 영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며, 정보사회에서는 ICT가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인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확산은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증대시키며 기업조직을 수평적이고 탄력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변환시킴으로써 생산 및 유통에 대한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정보사회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기존의 정보화정책 안에 배태되어 있는 시장가치를 조정할 수 있는 통찰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삶의 질에 관한 분석틀이 필요한 것이다.

비록 사회가 이러한 흐름에 대한 선택지를 포함하더라도 어떤 사회가 정보화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또 그러한 참여가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기존 연구에서 빠져있다. 기술의 진보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정보사회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불만이나 정치적 갈등의 뿌리를 간과하지 않도록 ICT 효과가 담지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을 천착하는 데 있다(Norris, 2001).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유지하고 자유와 평등 속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접근, 활용, 참여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를 전제로 할 때, 사회경제적 혜택구조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다원화된 네트워크 사회에서 민주적 토대가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어떤 가치체계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사회

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문화적 편차는 사회발전의 동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Myers, et al., 2002). 예를 들어 경제차원보다 가치차원에서 사회정치적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에 더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발전의 객관적인 차원과 근원적인 동력에 관한 핵심가치가 통합된 대안적 분석틀을 마련할 수 있다면, 기존의 정치경제적 틀에서 벗어나 삶의 질 과정에서 차지하는 정보화와 문화적 가치체계의 상대적 중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보사회에 관한 주류적 관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이 구조적 맥락에 연결되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본질적인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기존의 불평등이 강화되고 새로운 격차가 진행될 때, 정보화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은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더라도 효율성을 강조하는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에 내재하는 편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Ⅲ. 자료와 방법

사회발전의 목표와 ICT 역할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기준은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경제성장의 기회뿐만 아니라 민주화와 같은 사회발전의 통로에서 어느 정도 배제 또는 차단되어 있느냐이다(Leydesdorff, 2003).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또는 파괴적인 속성과 사회발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공동체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그동안 낙관 및 비관론의 어느 한 가지 관점에서 천착됨으로써 사회발전의 이론 축에서 등한시되어 온 영역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발전과 ICT의 역할을 통합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새로운 지형

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최근에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ICT 접근성, 이용도, 활용능력에 관해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10년 이후 정보화 발전에서 5회에 걸쳐 수위를 차지하고 특히 정보의 활용능력부문에서 강한 면모를 보임으로써 인터넷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있다(ITU, 2015).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전통적으로 경제 및 복지 수준이 높은 덴마크 및 스웨덴 등 북구, 영국 및 독일 등 서구, 홍콩 및 일본 등 동아시아 선진국들이 정보사회지수(Information Society Index)에서도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지난 5년간 정보화 발전이 가장 많이 향상된 국가는 87위에서 57위로 23계단 상승한 코스타리카와 48위에서 27위로 상승한 바레인이다. 정보사회지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정보화 발전 정도를 평가한 지표로 국가 간 ICT 역량을 비교, 분석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자료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반영하여 본 연구의 정보화 측정도구로 활용한다.

오늘날 정보화와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사회발전의 개념은 경제성장과 분배의 쟁점을 넘어서 사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과제로서 삶의 질을 포함한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경제적으로 풍요한 국가들이더라도 정치적으로 대립이나 갈등에 직면하거나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Midgely, 1994; 조명환 외, 1998).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경제적 차원만큼이나 경제외적인 차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론적 및 경험적 수준에서 삶의 질의 개념은 크게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다(Nussbaum, et al., 1997). 전자가 교육, 주거, 의료, 복지 등 사회 환경에 대한 물리적 측면을 나타내는 데 비해, 후자는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욕구가 어떻게 충족되는가와 같이 삶의 조건에 대한 만족도를 말한다. 이 글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환경 및 기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의미에서 인간

〈표 1〉 세계 정보화 발전 수준

국가	2015		2010	
	순위	점수	순위	점수
한국	1	8.93	1	8.64
덴마크	2	8.88	4	8.18
아이슬란드	3	8.86	3	8.19
영국	4	8.75	10	7.62
스웨덴	5	8.67	2	8.43
룩셈부르크	6	8.59	8	7.82
스위스	7	8.56	12	7.60
네덜란드	8	8.53	7	7.82
홍콩	9	8.52	13	7.41
노르웨이	10	8.49	5	8.16
일본	11	8.47	9	7.73
핀란드	12	8.36	6	7.96
호주	13	8.29	15	7.32
독일	14	8.22	17	7.28
미국	15	8.19	16	7.30
뉴질랜드	16	8.14	19	7.17
프랑스	17	8.12	18	7.22
모나코	18	8.10	22	7.01
싱가포르	19	8.08	11	7.62
에스토니아	20	8.05	25	6.70
벨기에	21	7.88	24	6.76
에이레	22	7.82	20	7.04
캐나다	23	7.76	21	7.03
마카오	24	7.73	14	7.38
오스트리아	25	7.67	23	6.90

자료: ITU (2015), The Information Society Index.

의 본성과 주관적인 평가기준을 반영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회발전의 목표는 결국 사람들이 발전의 가치에 대해 갖는 사회적 관심과 반응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Suh, 2014).

사회발전의 객관적 및 주관적 차원의 균형에 기초한 분석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성장과 민주화, 정보화에 관한 객관적 지수를 채택하며, 주관적 차원에

서는 삶의 만족도와 문화적 가치체계에 관한 변수를 포함한다. 경제성장의 측정은 발전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을 활용한다(World Bank, 2015).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발전에서 중요한 독립변수인 민주화에 대한 측정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주화지수(Democracy Index)를 사용한다(EIU, 2015). 이

지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이코노미스트지(誌)의 정보 분석기구(Intelligence Unit)에서 선거투명성과 다원주의, 정부역할, 정치참여 및 문화, 시민자유 의 다섯 가지 범주를 수량화하여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체계의 변량정도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기저적인 발전 동력을 바탕으로 삶의 질의 편차와 문화적 가치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全) 세계의 80%이상을 포함하는 지역에 대

한 세계가치조사의 자료(World Values Survey, 2015)를 활용한다. 이 자료는 가치변동과 이에 따른 사회변화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의 국제 네트워크 조직에 의해 국가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수집된다. 1981년에 첫 조사가 시행된 이후, 평균 5년의 파동 주기로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국가별 평균 2,000명 내외의 표본을 추출하며, 총화된 무작위 표본추출방법에 의해 직접면접방식으로 조사

〈표 2〉 측정지표의 구성

변수	측정지표	세부내용
삶의 질	삶 만족도	‘모든 조건을 고려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항목에 대한 면접조사 (국가별 평균 1,491명 대상, 10분위 척도측정)
권위수용	정치조직	‘전반적으로 당신은 정치가 당신 삶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항목에 대한 면접조사 (국가별 평균 1,491명 대상, 5분위 척도측정)
성별지향	분업구조	‘전반적으로 당신은 남성이 여성보다 리더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보는가?’ 항목에 대한 면접조사 (국가별 평균 1,491명 대상, 5분위 척도측정)
위험추구	도전정신	‘당신은 삶의 활기에 대해 위험추구 성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항목에 대한 면접조사 (국가별 평균 1,491명 대상, 5분위 척도측정)
자립수준	주체의지	‘당신은 자립성을 가정교육의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는가?’ 항목에 대한 면접조사 (국가별 평균 1,491명 대상, 찬성비율)
이타주의	공동의식	‘당신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가정교육의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는가?’ 항목에 대한 면접조사 (국가별 평균 1,491명 대상, 찬성비율)
자아표현	자아의식	‘당신은 자아표현을 가정교육의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는가?’ 항목에 대한 면접조사 (국가별 평균 1,491명 대상, 찬성비율)
포스트 모던	탈물질	‘당신은 물질주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항목에 대한 면접조사 (국가별 평균 1,491명 대상, 5분위 척도측정)
신뢰수준	사회자본	‘전반적으로 당신은 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 항목에 대한 면접조사 (국가별 평균 1,491명 대상, 10분위 척도측정)
경쟁추구	생존가치	‘당신은 경쟁이 개인의 생존과 사회의 발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항목에 대한 면접조사 (국가별 평균 1,491명 대상, 10분위 척도측정)
노동의욕	경제성공	‘당신은 노동의욕이 경제적 성공과 더 나은 삶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는가?’ 항목에 대한 면접조사 (국가별 평균 1,491명 대상, 10분위 척도측정)
불평등	관용수준	‘소득이 좀 더 평등해져야 한다와 동기부여를 위해 소득차이가 필요하다’ 항목에 대한 면접조사 (국가별 평균 1,491명 대상, 선택비율)
정부책임	참여수준	‘삶의 혜택은 정부책임이 더 크다 또는 사람들 책임이 더 크다’ 항목에 대한 면접조사 (국가별 평균 1,491명 대상, 선택비율)

자료: World Values Survey, 2015.

가 진행된다. 설문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정보를 포함하여 가족, 종교, 직업 등 생활세계로부터 정치, 환경, 국가 등 거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가치와 태도에 관해 표준형으로 구조화된 25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위해서 국가별 전담 조사팀에 의해 현지조사의 내적 일관성을 엄격히 확인하며, 조사범위로는 국가별 시계열 자료까지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국인 57개국 85,000여명 가운데 자료획득이 가능한 51개국의 73,042명에 대한 2015년 의식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한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삶의 질과 연관된 13개 핵심영역의 설문문항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틀을 마련한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별 측정지표와 세부내용은 <표 2>에서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조건을 고려할 때, 당신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또는 “삶의 혜택은 정부책임이 더 크다 아니면 사람들 책임이 더 크다”라는 설문문항에 대해 국가별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점수의 평균치로 측정한다.

이와 같은 분석도구를 기초로 본 연구는 사회발전과 ICT의 역할에 대한 분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반영한다. 첫째, 사회발전에 관한 전통적인 변수 이외에 기존 연구가 등한시한 변수를 새로이 포함한다. 삶의 질에 관한 정보화의 요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분석틀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발전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비교연구의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기존의 사례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노력한다. 주어진 사회의 특수성도 의미가 있지만 비교의 관점에서 국제 지형에 관한 공통분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발전의 주관적 차원에 대한 연구가 매우 취약하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각국의 문화적 가치체계가 사회발전과정에서 어떤 유형으로 범주화되는지 그리고 정책요소로 활용가능한지의 여부를 가

늑하기 위해 경험적 자료를 가치관 지형도로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삶의 질에 관한 분석모형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langle \text{모델 1} \rangle \quad b_0 + b_1(\text{정보화}) + b_2(\text{경제성장}) + b_3(\text{민주화}) + e$$

$$\langle \text{모델 2} \rangle \quad b_0 + b_1(\text{권위수용}) + b_2(\text{성별지향}) + b_3(\text{위험추구}) + b_4(\text{자립수준}) + b_5(\text{이타주의}) + b_6(\text{자아표현}) + b_7(\text{포스트모던}) + b_8(\text{신뢰수준}) + b_9(\text{경쟁추구}) + b_{10}(\text{노동의욕}) + b_{11}(\text{불평등}) + b_{12}(\text{정부책임}) + e$$

<모델 1>은 전술한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여 사회발전의 공통분모에 관한 기본 모형이며, e 는 회귀식의 잔차(Error Term)를 의미한다. <모델 1>에서는 객관적 측면에 분석의 초점을 두는 데 비해, <모델 2>는 세계가치관 조사의 핵심항목을 문화적 가치체계의 변수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삶의 질 변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수로서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각 모델에 걸친 다공선성 효과를 사전에 제어하기 위해서 설계된 결과이다.

IV. 분석결과

사회발전의 공통분모인 경제성장, 민주화, 정보화의 객관적 차원에 관한 분석모델에 따른 (비)표준화된 회귀계수는 <표 3>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분석결과는 회귀결정계수(R^2_{adj})값에서 알 수 있듯이 모델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변량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25%)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회귀계수는 t 검증 값을 통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여타

〈표 3〉 객관적 차원의 회귀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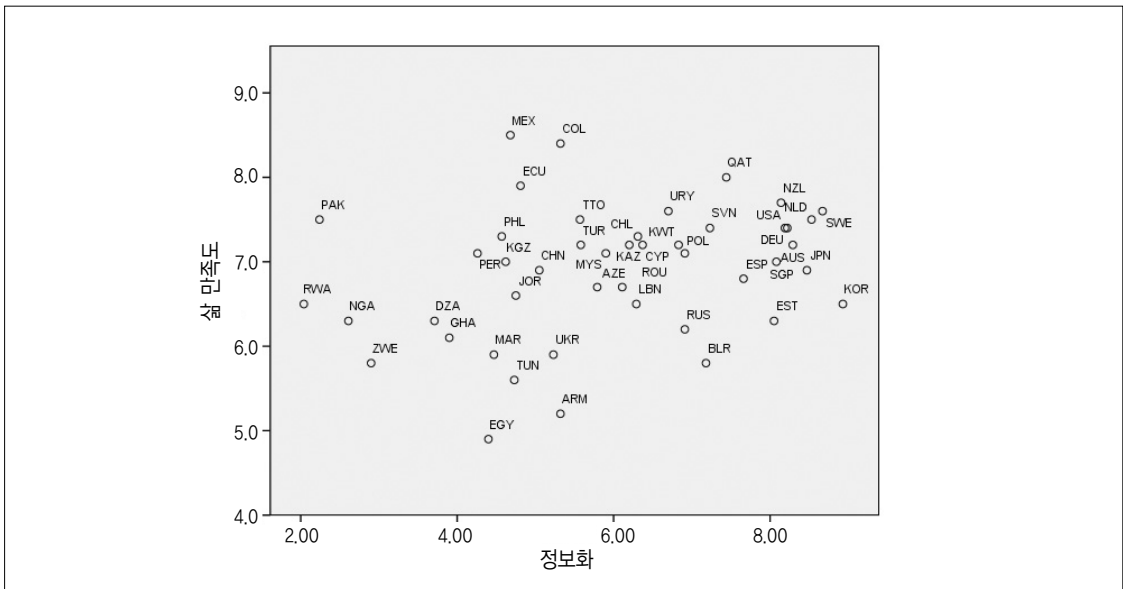
독립변수	삶의 질(종속변수)		
	b	B	VIF
상수	6,442(.420)	-	-
경제성장	1,883***(.000)	.521	2.167
민주화	.165***(.061)	.431	1.539
정보화	-.153*(.082)	-.357	2.813
R ² _{adj}	.256***		
F	6.173		
P	.001		
N	46		

주: *P<0.1, **P<0.05, ***P<0.01

- 1) 회귀계수: b(비표준화), B(표준화)
- 2) 괄호안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를 나타냄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정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민주화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국제지형에서 주어진 국가의 상대적 위치를 가늠하는 기본 축에서 두 가지 변수가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서문기, 2015).

이와는 달리 여타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정보화에 관한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만 계수효과는 부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파괴적인 속성이 확장되면,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자본의 논리를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삶의 질에 관한 사회능력의 한계를 자



〈그림 1〉 정보화와 삶의 만족도

연스럽게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보의 불균형 및 정보비대칭에 의한 정보격차는 정치적 참여격차를 강화하고 각 사회집단간의 협상력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이에 따라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작동시키는 기제가 왜곡될 수가 있다. <그림 1>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서처럼 정보화의 수준이 높더라도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을뿐더러 역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와 같이 정보화 수준이 낮더라도 삶의 만족도가 반드시 여기에 비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단계의 분석은 사회발전의 주관적 차원에 관한 것으로 문화적 가치체계를 반영한다. 삶의 질에 관한 국가 간 비교문화의 분석결과는 <표 4>에서 제

시되고 있다. 분석모델은 전반적으로 종속변수의 변이 정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57%를 설명하고 있다. 다른 조건들을 통제한다면, 12개의 영역별 독립변수 가운데 자립수준, 경쟁추구, 정부책임의 변수가 삶의 만족도에 대해 공통적으로 계수효과가 정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기 0.05 및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반면에 동일한 조건일 때, 권위수용, 성별지향, 위협추구, 이타주의, 자아표현, 포스트모던, 신뢰수준, 노동의욕, 불평등의 계수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문화적 가치체계에서 세 가지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를 삶의 질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공통분모로 선별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자립수준의 가치가 높

<표 4> 주관적 차원의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삶의 질(종속변수)		
	b	B	VIF
상수	2.345(1.205)	-	-
권위수용	.005(.003)	.167	1.665
성별지향	-.001(.003)	-.085	3.007
위협추구	.057(.198)	.035	1.731
자립수준	.024***(.008)	.356	1.829
이타주의	.009(.008)	.125	1.359
자아표현	-.003(.009)	-.045	2.337
포스트모던	.027(.210)	.017	1.986
신뢰수준	-.007(.006)	-.153	1.707
경쟁추구	.413**(.229)	.348	2.363
노동의욕	-.056(.199)	-.059	5.111
불평등	-.042(.093)	-.057	1.905
정부책임	.347***(.107)	.448	2.241
R ² _{adj}		.574***	
F		6.623	
P		.000	
N		51	

주: *P<0.1, **P<0.05, ***P<0.01

1) 회귀계수: b(비표준화), B(표준화)

2) 괄호안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를 나타냄

게 평가될수록 주체적인 신념체계와 엄격한 행위양식을 채택함으로써 불확실한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경쟁추구의 영역은 사회구성원이 제한된 자원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의 강도와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구조를 반영함으로써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 정부책임을 강조하는 가치체계는 사회구성원에게 교육,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영향을 주며, 이는 정부의 역할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정일환, 1998; 정진성 외, 2009).

〈표 5〉는 사회발전의 객관적 및 주관적 차원을 통합한 대안 모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주며,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대해 경제성장, 민주화, 정보화의 객관적 차원과 자립수준, 경쟁추구, 정부책임의 가치지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다. 분석결과는 회귀결정계수의 값에서 알 수 있듯이 모델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변량의 63%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다결정계수(Multiple R²)에 따른 각 독립변수의 분산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2.0 이하의 값에 그침으로써 분석 모델에서 다공선성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추정된다. 여타 변수들의 조건이 같다면,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경제성장의 계수효과는 정의 방향을 가지며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반면에 정보화에 관한 회귀계수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부의 방향으로 통계수준 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경제성장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지만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한다. 사회발전의 주관적 차원과 관련해서 자립수준의 계수효과는 정의 방향을 보여주며, 통계적으로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나 독립심과 주체의지의 가치를 강조할수록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경쟁추구와 정부책임의 계수효과는 모두 정의 방향으로 통계수준 .01에서 유의미하다. 개인의 생존가치와 정책의 책임이 강조될수록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며, 여타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5〉 통합적 모델의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삶의 질(종속변수)		
	b	B	VIF
상수	2.345(1.205)	-	-
경제성장	1.227**(0.000)	.340	2.810
민주화	.060(0.050)	.158	2.096
정보화	-.138*(0.073)	-.323	3.523
자립수준	.017**(0.007)	.264	1.497
경쟁추구	.498***(.128)	.379	1.151
정부책임	.312***(.088)	.395	1.515
R ² _{adj}		.630***	
F		13.745	
P		.000	
N		46	

주: *P<0.1,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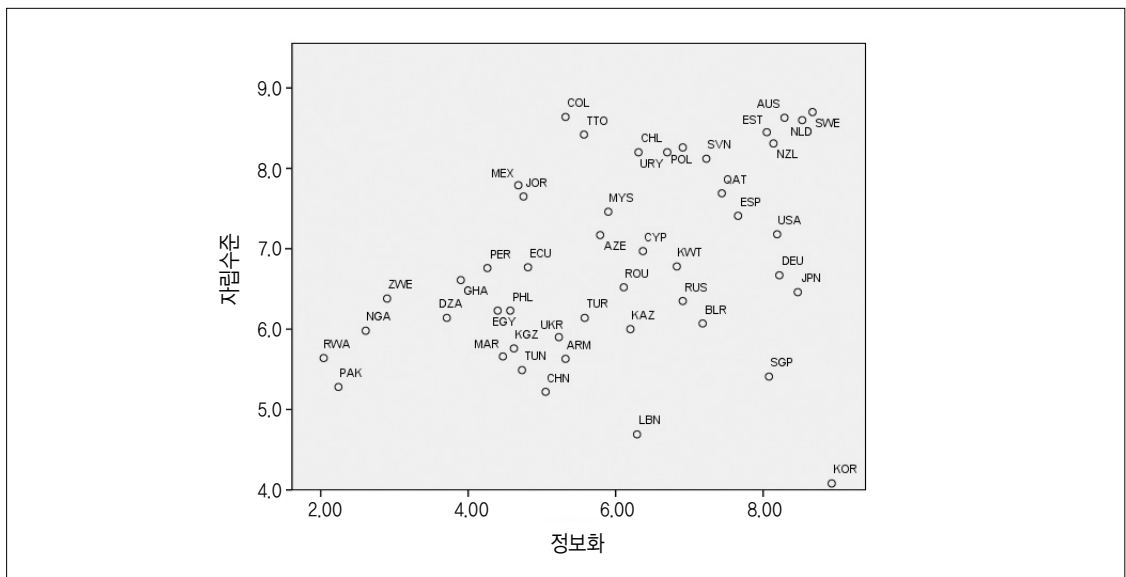
1) 회귀계수: b(비표준화), B(표준화)

2) 괄호안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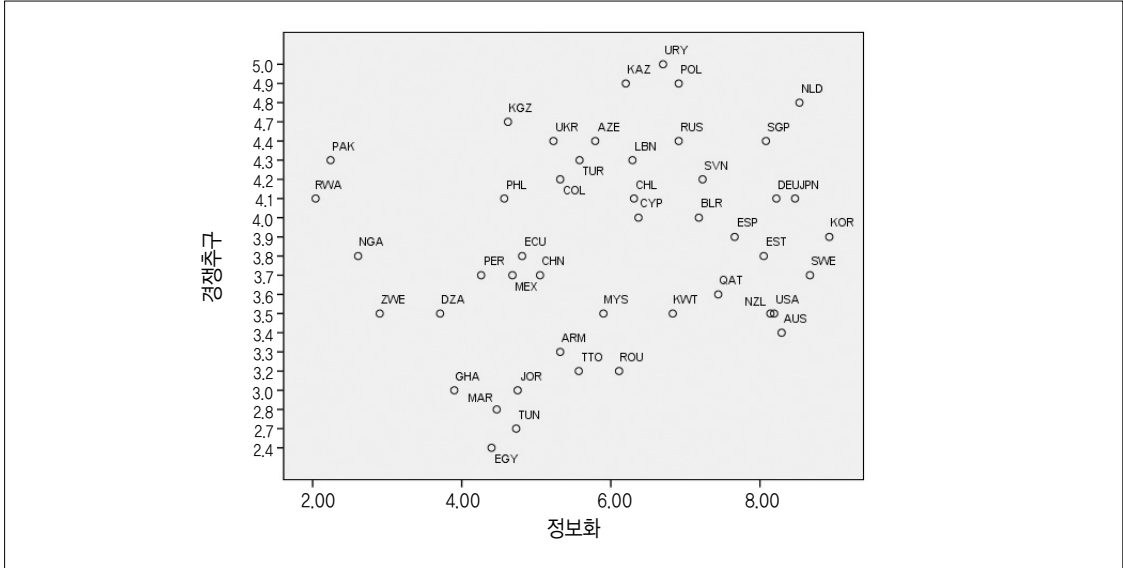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본 연구의 중심가설인 정보화 효과에 관한 분석결과이다. ICT의 도입과 확산이 사회발전의 불확실성을 줄이지 못하며,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공급하고 활용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Ciborra, 2005). 기술혁신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화의 기대효과는 주류적 관점의 예측과 달리 삶의 질과 관련하여 타당하지 않으며 경제성장 및 문화적 가치체계를 통제변인으로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비록 ICT를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정하더라도 정보화 과정은 기존의 지배적인 구도를 강화하고 불평등을 악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Goldsmith, et al., 2004). 다른 한편으로 민주화에 관한 회귀계수효과는 정의 방향을 보여주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ICT가 정치적 민주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맹목적인 낙관론에 기초하기보다 각국의 고유한 특성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적은 사례수를 복합지수에 의해 측정하는 접근법의 한계이기도 하다(Frey, et al., 2000).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

면, 사회발전의 주관적 및 객관적 차원과 정보사회를 둘러싼 쟁점을 간과한 채 기술 및 경제 등 특정한 측면에 초점을 두는 접근으로는 정보화화 삶의 질의 편차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David, et al.,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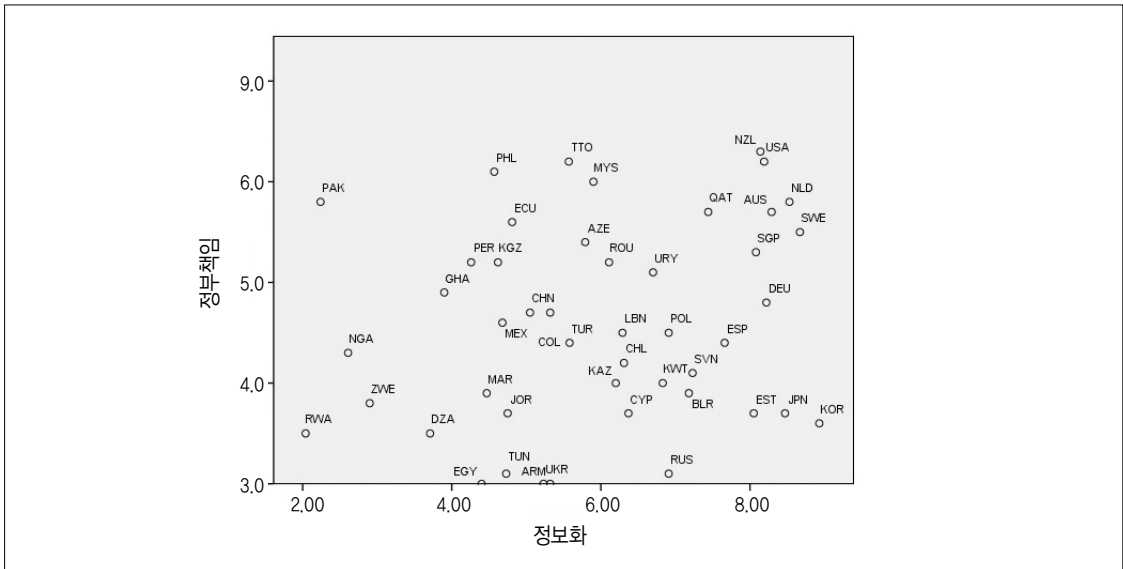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통계분석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밝혀진 사회발전의 핵심가치와 정보화가 갖는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자립수준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등 서구 선진국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반대 진영에 위치하고 있다. 양 집단의 중간지대는 서구, 동구, 남미, 아시아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정보화수준이 매우 높은 데 비해 자립수준은 상당히 낮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위계질서적인 문화에 의해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이에 따른 역동적인 발전의 흐름에 주목할 수가 있다. 이론적 지형에서 자립수준의 가치는 주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의 역능성



<그림 2> 정보화와 자립수준



〈그림 3〉 정보화와 경쟁추구



〈그림 4〉 정보화와 정부책임

(Capability)과 주어진 환경변화의 구조적 함수관계를 의미한다(Sen, 2009). 이러한 문화에서는 사회구성원이 삶의 기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특성에 기초한 정보통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3〉에서는 르완다,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의 예외적인 사례를 배제할 때, 정보화 수준이 높을수록 경쟁추구의 가치를 강조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한국, 일본,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경우이며, 반대로 이집트, 튀니지, 요르단, 모로코, 가나 등에서는 정보화 수준과 경쟁추구의 가치가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보화와 경쟁추구 가치가 같이 간다는 것은 도전적인 자세로 일에 몰두하는 사회에서는 최상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감수하며 창의적인 기술혁신과 정보화과정이 진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경쟁추구의 성향이 높아지면 기존의 대량생산체제방식보다는 네트워크 방식에 기초한 신기술산업이나 정보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며, 실제로 사회발전의 열망수준이나 기업가 정신이 높은 동아시아 및 서구 국가군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정보화와 정부책임의 국가별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 4>에서는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정부책임의 가치가 중요한 문화유형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경향은 정보화 수준이 아주 높은 한국 및 일본과 함께 정보화수준이 낮은 르완다,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을 가외치 또는 이상치로 간주할 때 가능하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정보화과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깊이 있는 사례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보편적인 기준에서 볼 때, 정부책임의 가치가 높을수록 발전과정에서 개인의 영역보다 정책 및 제도적 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으며 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반응정도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Lessig, 1999). 이러한 유형의 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의 개인적 요구나 주장보다 정부정책을 기대하지만 동시에 이를 평가 및 조정의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촉매제 역할을 수반할 수 있다(Shapiro, 2000). ICT를 사회구성원에게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공공재로 간주하고 정보화에 대한 수요가 정부정책에 충분히 투영될 때 정보화과정은 발전하는 것이다.

V. 결론 및 함의

정보화 발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ICT 도입과 확산을 통해 관련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짐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기술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낙관론은 정보사회가 새로운 온라인 방식에서 부를 창출하고 전자민주주의에 의해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많은 국가들에게 이를 따라가도록 요구한다(Webster, 2006). 예를 들어 ICT의 활용을 통해서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빈곤 및 불평등 수준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 이 관점에 의하면,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정보화과정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핵심요소로서 간주된다. 공공부문의 정책운영과 사회발전의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장, 국가, 사회의 정합성이 향상된다. 또한 기존의 선진국이 독점적으로 수익성을 창출해 온 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의 상대적 이점에 대한 비교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OECD,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ICT가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보는 주류적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 및 민주화의 조건이 같을 경우 정보화가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ICT 혁신에 따른 낙수효과가 너무 느리게 진행되거나 왜곡된 여과효과로 삶의 질 차원에서 실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비판적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사회발전에 관한 예외적인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분석결과는 경제성장이 삶의 질을 제고하며, 정보화와 문화적 가치 체계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적 유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삶의 질에 작용하는 가치유형으로는 자립수준, 경쟁추구, 정부책임이 중요하며, 정보화와 세 가지 가치의 조합은 전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만약 사회문화적 차원이 함께 고려된다면, 정보화과정은 사회구성원의 참여 및 신뢰 수준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질에 관한 사회적 능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맥락과 가치관 지형은 필연적으로 정책 영역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에 관한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발전의 연구에서 기술의 혁신 및 확산 못지않게 사회적 배태성에 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등에 초점을 두는 기존의 연구는 ICT의 역할을 규정하는 사회능력을 간과함으로써 이론적 한계를 갖는다. 주어진 사회의 삶의 질과 신기술의 만남은 ICT 프로젝트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필수적인 사회발전의 공통분모와 이에 따른 삶의 질을 반영하여 통합적인 분석틀을 요구한다.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색과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기술 및 사회 차원의 역동적인 이론적 지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 ICT 혁신을 문화적 가치체계와 연결시키는 대안적 접근의 중요성이다.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할에 초점을 두는 발전연구는 대부분 서구중심의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며 불가피하게 정치적 이념에 연루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단순히 연결성을 확장하기 위한 통신수단의 자유화와 같은 주장은 사회발전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틀을 결여한 채, 무엇이 바람직한 효과인지 또는 그 효과가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놓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화 효과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경제 및 기술 중심의 정보인프라 단계를 넘어 제도적 운영 및 구성원의 신뢰를 반영하는 분석모델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화에 관한 새로운 이론적 도전을 목표로 진행하는 분석틀의 개발과 이에 기초한 경험적 연구는 정책분야에서 풍부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갈 수 있다. 정보화정책의 실행에 대한 장벽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속성을 이해할 때, 상향식 정책형성이 가능하며 결과

적으로 사회구성원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정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사회의 양과 질적인 측면을 같이 반영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공개하되 이에 관한 비판적인 논의의 수용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제지형에서 사회발전을 둘러싼 비교분석을 진전시키고 정보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치체계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험적인 기초과제로서 의의를 갖는다. 21세기 정보사회에서는 ICT의 역할에 관한 통합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추구하고 ICT의 접근, 활용, 참여에 대한 열망과 기대로부터 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사회의 현실에서는 ICT의 부정적인 효과와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경고음이 증가하고 있다. 이 신호는 역설적으로 좀 더 풍부한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여 정보화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개별 사례에 관한 질적 연구와 함께 누가 어떤 종류의 정보와 기술을 생산, 소비, 유통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개발하는지, 누구를 위한 기술인지, 그 혜택이 어떤 방식으로 배분되고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놓고 있다.

■ 참고문헌

- 서문기 (2008). “사회발전과정에서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15(4): 105-119.
- 서문기 (2015). “잘 사는 국가는 행복한가? 삶의 질에 관한 국가간 비교분석.” 『한국사회학』, 49(1): 111-137.
- 송경재·장우영 (2008). “한국 정보화 행정 및 정책 연구

- 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1990-2007)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5(1): 323-349.
- 송효진 (2015). “IT ODA,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오는가?” 「정보화정책」, 22(1): 73-95.
- 송희준 (2008). “정보화정책의 역사적 성찰과 향후 과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1(1): 1-15.
- 오철호 (2015). “정책결정, 증거 그리고 활용: 연구경향과 제언.” 「한국정책학회보」, 24(1): 53-75.
- 유재미·오철호 (2015). “e-거버넌스 연구의 경향 분석: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22(4): 3-21.
- 정일환 (1998). “사회발전모형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실증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5: 121-145.
- 정진성의 (2009). 「사회의 질 동향」. 서울: 서울대출판문화원.
- 조명환·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한세익 (2010). “한국정보화정책의 변천과 특징: 행위자 연결망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17(4): 23-43.
- 황종성 (2007). “한국식 정보화모델의 탐색.” 「정보화정책」, 14(4): 4-19.
- 梅棹忠夫 (1967). 知的生産の技術. 東京: 岩波書店.
- Bell, D.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Y: Basic Books.
- Beniger, J. (1986). *The Control Revolution: Technological and Economic Origins of the Information Society*.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ck, G. (1998). *Telecommunication Policy for the Information Age: From Monopoly to Competitio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wn, A. (2006). “Towards the Next Renaissance? Making Collective Decision Combining Community, Expert and Organizational Knowl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ulture and Change Management*, 6(3): 43-55.
- Brownlie, I. (2002).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stells, M.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NJ: Wiley.
- Ciborra, C. (2005). “Interpreting e-Government and Development: Efficiency, Transparency or Governance at a Distance?” *Information Technology & People*, 18(3): 260-279.
- David, A. & Foray, D. (2003). “Economic Fundamentals of the Knowledge Society.” *Policy Futures in Education*, 1(1): 20-49.
- Donner, J. (2008). “Research Approaches to Mobile Use in the Developing World: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Information Society*, 24(3): 140-159.
- EIU (2015). *Democracy Index 2015: Democracy in an Age of Anxiety*.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t Unit.
- Franda, M. (2001). *Governing the Internet: The Emergence of an International Regime*. Boulder: Lynne Rienner.
- Frey, B. & Stutzer, A. (2000). “Happiness Prospers in Democrac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79-102.
- Garnham, N. (1997). “Amartya Sen’s ‘Capabilities’ Approach to the Evaluation of Welfare: Its Application to Communications.” *Javnost-The Public*, 4(4): 25-34.
- Golding, P. & Murdock, G. (1978). “Theories of Communication and Theories of Society.” *Communication Research*, 5(3): 339-356.
- Goldsmith, S. & Eggers, W. (2004). *Governing by Network: The New Shape of the Public Sector*. D. C.: Brookings Institute.
- Heeks, R. (2012). “ICT for Development: Solutions Seeking Problem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27(4): 326-338.
- ITU (2015). *World Information Society Report*. Geneva: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 Keohane, R. & Nye, J. (2000). “Globalization: What’s New? What’s Not? (and So What?)” *Foreign Policy*, 118: 104-130.
- Lessig, L. (1999).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NY: Basic Books.
- Leydesdorff, L. (2003). *A Sociological Theory of*

- Communication: The Self-Organization of the Knowledge-Based Society*. uPublish.com: Universal Publishers.
- Machlup, B. (1962).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s*.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don, S. (2004). "Evaluating the Developmental Impact of e-Governance Initiatives: An Exploratory Framework." *Electronic Journal on Information Systems in Developing Countries*, 20(5): 1-13.
- Midgely, J. (1994). "The Challenge of Social Development: Their Third World and Ours." *Social Development Issues*, 16(2): 1-13.
- Myers, D. & Tan, B. (2002). "Beyond the Models of National Culture in Information System Research." *Journal of Global Information Management*, 10(1): 24-32.
- Norris, P. (2001).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ussbaum, M. & Sen, A. (1997). *The Quality of Life*. Oxford: Clarendon.
- OECD (2015).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Paris: OECD.
- Oosterlaken, I. (2015). *Technology and Human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 Schiller, H. (1984). *Information and the Crisis Economy*. NJ: Ablex.
- Sen, A. (2009). "Development As Capability Expansion." In S. Fukuda-Parr & K. Shiva Kumar (eds.), *Handbook of Human Develop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hapiro, A. (2000). *The Control Revolution: How the Internet Is Putting Individuals in Charge and Changing the World We Know*. NY: Public Affairs.
- Sichel, D. (1997). *The Computer Revolution: An Economic Perspective*. DC: The Brookings Institute.
- Suh, M. (2014).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The Myth of Development in South Korea." *Korea Observer*, 45(1): 61-86.
- Thompson, M. (2008). "ICT and Development Studies: Towards Development 2.0."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20(6): 821-835.
- UNDP (2015). *Human Development Repor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Unwin, T. (2009). "Development Agendas and the Place of ICTs." In T. Unwin (ed.), *ICT4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de, R. (2002). "Bridging the Digital Divide: New Route to Development or New Form of Dependency?" *Global Governance*, 8: 365-388.
- Webster, F. (2006).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London: Routledge.
- World Bank (2015). *World Development Repor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World Values Survey (2015). *WVS Database*. www.worldvaluessurvey.org

〈부록〉 조사대상 국가명 약호(국제표준화기구)

국가명	약호	국가명	약호
Algeria	DZA	Morocco	MAR
Armenia	ARM	Netherlands	NLD
Australia	AUS	New Zealand	NZL
Azerbaijan	AZE	Nigeria	NGA
Belarus	BLR	Pakistan	PAK
Chile	CHL	Peru	PER
China(Main)	CHN	Philippines	PHL
China(Taiwan)	TWN	Poland	POL
Colombia	COL	Qatar	QAT
Cyprus	CYP	Romania	ROU
Ecuador	ECU	Russian Federation	RUS
Egypt	EGY	Rwanda	RWA
Estonia	EST	Singapore	SGP
Germany	DEU	Slovenia	SVN
Ghana	GHA	Spain	ESP
Iraq	IRQ	Sweden	SWE
Japan	JPN	Trinidad Tobago	TTO
Jordan	JOR	Tunisia	TUN
Kazakhstan	KAZ	Turkey	TUR
Korea(South)	KOR	Ukraine	UKR
Kuwait	KWT	United States	USA
Kyrgyzstan	KGZ	Uruguay	URY
Lebanon	LBN	Uzbekistan	UZB
Libya	LBY	Yemen	YEM
Malaysia	MYS	Zimbabwe	ZWE
Mexico	MEX	N	51